

## 개성공단의 지정학 예외공간, 보편공간 또는 인질공간?\*

Geopolitic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pace of Exception,  
Universal Space or Hostage Space?

이승욱\*\*

이 연구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다양한 비전, 이해, 욕망의 충돌과 갈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은 단지 기존의 영토주권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로부터 예외공간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북한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이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고 경쟁하는 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지정학적 시선, 지경학적 상상력 등 비판지정학의 개념들에 기반을 두어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 담론, 상상력의 정치적 갈등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담론의 충돌은 북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대중 담론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과 전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개성공단, 지정학적 시선, 지경학적 상상력, 예외공간, 인질공간

### 1. 서론

2016년 2월 10일, 통일부는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 이 논문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부)으로 한국연구재단 한국사회과학연구사업(SSK)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4S1A3A2044551).

\*\* 카이스트 인문사회과학부 조교수(geolee@kaist.ac.kr)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총 6160억 원(5억 6000만 불)의 현금이 유입되었고, 작년에만도 1320억 원(1억 2000만 불)이 유입되었으며,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결국 국제사회가 원하는 평화의 길이 아니라,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sup>1)</sup>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같은 해 8월 현대아산과 북한정부 간 「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체결, 그리고 뒤이어 2003년 6월 1단계 개발 착공과 함께 시작되었던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대표적인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2015년 11월 기준으로 개성공단에는 총 124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북측 노동자 5만 4763명과 남측 노동자 803명이 일하고 있었으며, 생산을 시작한 2005년부터 총 31억 8523억 달러의 누적 생산액을 기록했다.<sup>2)</sup> 그럼에도 그동안 개성공단 운영은 한반도 지정학적 위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받아왔다. 2008년 3월 북한은 키리졸브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항의로 세 차례에 걸쳐 육로 통행을 차단했고, 2010년 천안함 관련 남측의 5·24조치 발표에 따라 개성공단에 대한 신규투자가 금지되었다. 2013년 4월 북측에서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한 항의 수위를 높여 개성공단의 북측 노동자들을 전원 철수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약 5개월가량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즉, 개성공단은 남북 간의 노동력, 자본, 상품 등이 초국경적인 형태로 연계된 지정학적인 공간인 동시에 남북 양측이 지정학적 논리를 내

1) 통일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다.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745&mode=view&page=3&cid=44527>.

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2016.2.10.) 기사를 인용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0/0200000000AKR20160210064052014>. HTML.

세우고 관찰하는, 그 결과 지정학적 갈등이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매개되는 모순적 공간으로 “미완성, 불안정, 불확실성이 구조적으로 내재한” 공간이었다(박명규, 2015: 366). 이런 의미에서 지난 2월 통일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발표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돌발적인 사건이기보다는, 개성공단의 구조적 성격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갈등과 논란은 주로 남북 간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했지만, Rüdiger Frank, Théo Clément(2016)가 지적했듯이 이런 갈등을 분석하는 데서 ‘남한 또는 한국’과 ‘북한’이라는 집합적 성격의 용어 사용은 개성공단과 관련해 상이한 목표와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양한 집단들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과 상상력의 충돌과 갈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은 기존의 영토주권과 한반도 지정학적 구조의 예외공간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북한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이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고 경쟁하는 장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개성공단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논쟁은 지난 2월 개성공단의 폐쇄를 계기로 더욱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 진영이 개성공단을 북한 정권을 지속시키는, 그리고 북핵과 미사일 개발자금을 공급하는 문제공간 또는 남측의 개성공단 인원들에 대한 인질공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인데 반해,<sup>3)</sup> 중도 및 진보 진영에서는 개성공단을 향후 한반도 통일을 위한 실험공간으로서의 의의를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반도 경제라는 미래의 보편공간을 예비하는 곳으로 보고 있다.<sup>4)</sup> 그리

3) 개성공단에 대한 다양한 비전들을 예외공간, 문제공간, 보편공간, 인질공간으로 기술했는데, 이 가운데 예외공간은 영토주권 논리와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진 개념인데 반해, 보편공간, 문제공간, 인질공간은 수사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

4)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개성공단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진보·중도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갈등으로 단순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개성공단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구도를 보수와 중도·진보 진영으로 나누어 각 진영의

고 이와는 다른 차원에서 진보진영은 개성공단이라는 지정학적 프로젝트를 통한 안보와 평화의 증진이라는 지정학적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개성공단의 지정학적 성격을 북한 체제 지속을 위한 현금지급기로 한정하면서 오히려 지정학적 위협을 가중시키는 공간으로 보거나, 또는 초코파이 등이 확산되면서 북한 체제전복을 꾀하는 기회의 공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글에서는 지정학적 시선(geopolitical vision), 지정학적 상상력(geopolitical imagination) 등 비판지정학의 개념들과 함께 이를 지정학에 확장시켜 지정학적 시선(geo-economic vision), 지정학적 상상력(geo-economic imagination) 등의 개념들을 통해 개성공단을 둘러싼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 욕망, 상상력의 충돌과 타협을 분석하고자 한다.<sup>5)</sup> 따라서 이 논문의 제목인 “개성공단의 지정학”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지정학, 즉 국제관계에 대한 지리적 요인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 비전, 상상력의 정치적 과정의 의미라는 비판지정학적 차원에서 사용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둘러싼 다양한 정치적 갈등과 협상에서 북한 정부, 관료, 노동자 역시 중요한 행위자이지만, 이 글에서는 북한 외부 행위자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 담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

지배적인 시선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석상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중도·진보세력뿐만 아니라 보수세력 역시도 개성공단에 대한 일관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중앙미디어네트워크 회장이자 전 주미대사인 홍석현(2014)은 “통일 한국의 출발점은 개성공단의 성공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서 개성공단 사업을 더욱 확장할 것을 역설했다. 반면에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개성공단에서 노동자들의 저임금, 열악한 근로조건 등 착취의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조명훈, 2006).

- 5) 이러한 개념들은 비판지정학의 주요한 분석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은 기존의 고전지정학과는 차별화되는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즉, 비판지정학에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동원하는 과정에 주목한다(지상현·콜린 플린트, 2009: 171~172). 따라서 지정학적이거나 지정학적 시선, 상상력, 담론의 작동은 단순히 이미지의 생산과 유통의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정치세력의 정치경제학적 전략과 긴밀히 연관되면서 이들의 이해관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을 둘러싼 이런 시선의 갈등과 충돌은 북한, 남북관계, 통일에 대한 대중담론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의 대북 정책의 방향과 전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글에서는 우선 개성공단을 기존의 영역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질서에서의 ‘예외공간’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기반으로 국내외 정치세력들 간에 개성공단을 둘러싼 비전, 이해, 상상력의 정치적 갈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 2. 개성공단: 한반도 예외공간의 탄생

2002년 11월 20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를 통해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이하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르면 개성공단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 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

제9조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2002년 11월 13일 개성공업지구 지정을 선포한 정령 4조는 “개성공업지구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권이 행사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sup>6)</sup> 위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개성공단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6) 개성공업지구 지정과 관련한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은 다음에서 인용했다.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03100000/2002/11/00310000020>

북한의 일반 법률을 적용하는 대신에 새롭게 제정된 개성공업지구법을 적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부분은 협의를 통해 처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이효원, 2015). 또한 개성공단의 개발과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개성공업지구 개발규정’,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개성공업지구 세관규정’, ‘개성공업지구 환경보호 규정’ 등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새롭게 채택했다. 이와 함께 남측 정부와 개성공단의 통신, 통관, 검역에 관한 합의서 체결함으로써 남측과 인력, 물자, 정보를 교류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그 결과 개성공단은 기존의 북한의 영역성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예외공간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북한의 기존 법률적 구속으로부터는 자유로운 대신, 새로운 개별법과 하위규정이 적용될 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새로운 지정학적 흐름에 대한 새로운 제도적 규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작동하는 다층적인 법적·제도적 공간이 만들어진 것이다.<sup>7)</sup>

개성공단을 둘러싼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한 부분은 이와 같이 개성공단은 북한 영토 주권(territorial sovereignty)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특히 북한 최초의 라선경제무역지대와 비교해 봐도 영토주권의 범위를 상당 수준 축소시킨 결과로 나타난 예외공간으로 볼 수 있다.<sup>8)</sup> 대표적인 예로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들 수 있다. 남측이 주도하는 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의 운영, 출입관리 및 물자반출입,

---

0211270852090.html.

- 7) 이효원(2015)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규정들이 개발적이고 불명확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규범 영역 역시 제한적이어서, 개성공단의 광범위한 경제활동을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북한의 일반 법률을 배제하면서 나타난 법적, 제도적 공백을 아직 채우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8) 개성공단 초기 5년에 대한 백서라고 할 수 있는 ‘개성공단 5년’에 따르면 개성공단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관하여 기존 북측법의 적용이 배제되고(제9조) 그 개발 및 운영이 사실상 남측 개발업자 및 관리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제10조, 제24조 등)에서 나진·선봉과도 다소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개성공단5년 발간위원회, 2008: 133).

건축 인·허가, 법제도 구축 및 투자자 재산권 보호 등의 일반행정업무와 정부대행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북한 법률인 『개성공업지구법』에 의해 설립되었고, 남한 법률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은 관리기관이다. 따라서 남북 양측 모두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행정권한을 인정받았으며, 그 결과 개성공업지구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다(채명민, 2011; 이효원, 2015). 또한 이효원(2015)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한에서 제정한 법률임에도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 직접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북한 주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기존의 여러 경제특구들과 마찬가지로 다층적·중첩적 형태의 주권 권력이 작동하는 현장이자 북한 행정권과 초국경적 관할권이 충돌하고 타협하는 공간이라 볼 수 있다(Easterling, 2014: 13).<sup>9)</sup>

이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의 개발과 운영은 Aihwa Ong의 구획화 기술(zoning technologies)에 대한 논의와 연결된다. Ong은 Carl Schmitt와 Giorgio Agamben의 주권과 예외 상태에 대한 논의를 신자유주의와 연관 지어 예외로서의 신자유주의 통치기술에 대한 이론을 발전시켰다. Agamben은 예외와 배제에 기반을 둔 주권 권력의 작동이 정치공동체로부터 배제된 호모 사케르(homo sacre)라는 존재를 창출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지만, Ong은 신자유주의에서 예외의 논리는 오히려 시장논리에 기반을 둔 계산에 의해 일정한 공간과 집단을 선택적으로 포함, 포섭하는 긍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2006: 5; 2012: 26). 즉, 신자유주의적 예외는 주권 권력 작동에서의 유연성을 높여 해외자본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영토의 분절화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이런 공간의 분절화에 대해 Ong은 기존의 국가 영토성을 균일한 정치공간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고

9) 여기서 초국경적 관할권은 개성에 소재한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서울에 소재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으로부터 지원, 운영지도 및 감독을 받고 있다는 측면을 의미한다(채명민, 2011: 82). 임금, 통행 등 개성공단 운영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남북 당국 간의 갈등은 이러한 북한 행정권과 초국경적 관할권 충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등급화된 또는 다채로운 주권(graduated or variegated sovereignty)”에 의한 차별적인 공간의 생산과 통제를 강조했다(2006: 7). 특히 그녀는 이러한 예외로서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as exception)는 주로 중앙집권적이며 권위주의적 통치구조를 가진 아시아 국가들에서 경제특구의 창출과 시민권에 대한 시장 논리의 부여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주목했다. 전자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을 목표로 해외투자, 기술이전, 국제적인 전문지식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전략적인 조건들을 일정 지역에 공간적으로 집약시킨 결과로 탄생한 공간이다(Ibid., 78). Ong은 이런 특구에서는 시민권에 대한 예외의 적용을 통해 소수 민족과 같이 일부 인구 집단에게는 정치적 가능성의 공간이 된다고 주장했다(2006: 101).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경제특구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부여된 조건들은 외부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동이나 환경과 같은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특구는 그 영문약자인 SEZ(Special Economic Zones)를 이용해 착취특구(Special Exploitation Zones)라고 호명되기도 한다(The Rediff, 2007).

Ong은 주권과 시민권의 논리가 신자유주의 합리성 및 기제와 연계되는 점에 주목하면서, 이런 예외성의 논리와 연관된 주권 권력의 공간적 실천의 대표적인 예를 구획화(zoning)라고 보았다. 그러나 예외공간으로서의 개성공단은 주권의 논리와 신자유주의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개성공단의 작동은 기존 북한 주권 권력과 영역성으로부터 예외를 의미하는 동시에 한반도 분단질서로부터 구조화된 지정학적 논리에서도 예외적인 공간이라는 의의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개성공단의 사례를 통해 Ong이 주목한 주권과 신자유주의뿐 아니라, 지정학적 논리 역시 예외공간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개성공단의 작동원리를 기존의 주권이나 영역성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며, 이런 주권의 논리에서 보면 예외성이 작동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Ong이 여기서 제기한 것처럼 신자유주의 논리가 이러한 예외성의 작동을 단순히 배제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차원으로 변화시키는 것만큼이나 지정학적 논리 역시 이런 개성공단이라는 예외공간의 지속, 변화 그리고 폐쇄에 이르기까지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Ong은 중국을 위시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특구 작동 논리를 설명하는 데서 해외 시장,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또는 (생산과 금융) 자본의 글로벌 순환과의 연계를 위해 기존의 영역성으로부터 예외적인 각종 특구들이 탄생한다고 설명하였다(2006: 77~78). 그러나 개성공단의 탄생과 작동은 기존의 경제특구에서 설명하는 경제논리 또는 신자유주의 논리로만 한정되어 설명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기존의 경제특구에서 특별세제, 노동 및 환경 관련 규정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마련된 조항이지만, 개성공단의 경우 오히려 이런 제도와 규정들이 지정학적 갈등의 대상이자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특이성이 존재한다.

이런 특이성은 다른 지점에서도 발견된다. 개성공업지구법 1조에서는 개성공단 설립의 목적을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이를 단지 선언적 의미로만 볼 수도 있다. 실제로 김정일 위원장도 개성을 특구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개성이 6·25 전쟁 전에는 원래 남측 땅이었으니 남측에 돌려주는 셈치고 북측은 나름대로 외화벌이를 하면 된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임동원, 2008: 466). 또한 개성공단 외에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들과 최근에 지정된 경제개발구 등은 북한경제 회생과 발전을 목적으로 북한 전역에 걸쳐 차별적으로 등급화된 통치체제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승욱, 2016). 그러나 북한의 다른 경제특구들 또는 경제개발구의 입지 등과 비교할 때 개성의 경우 군사적 요충지로서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성공단 개발의 논리를 경제논리로만 한정지어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고착화된 한반도 지정학 질서로부터 예외공간일 뿐만 아니라 이런 분단구조를 해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공간, 즉 남북이 통일을 실질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지정학적 의의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의 예외성은 한반도에 오랜 기간 작동한 지정학적 논리에서 예외적인 형태의 지정학적 공간이 탄생했다는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개성공단의 예외공간으로서의 이중성을 첫째, 북측의 영역성의 작동에서 기존의 영토 주권에 대한 예외적인 공간이라는 성격과 함께 둘째, 한반도 차원에서 볼 때 지정학적 논리, 대결, 갈등 그리고 단절의 공간에서 흐름과 협력의 지정학적 공간의 예외적 작동을 의미한다. 이런 예외성으로 때문에 연평해전 등과 같이 군사적 긴장이 간헐적으로 고조되거나 5·24 조치로 남북 간의 모든 경제협력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었음에도 개성공단은 계속 작동할 수 있었다.<sup>10)</sup> 그 결과 서해에서 남북 간의 교전이 오가면서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는 지정학적 위기와 각종 물자, 인력, 정보 등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개성공단을 오가는 지정학적 흐름이 공존하는 예외적인 지리정치경제적 경관을 형성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Doucette과 Lee(2015)는 개성공단의 실험을 ‘실험적 영역성(experimental territoriality)’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만뿐 아니라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개성공단은 새로운 실험적 형태의 영역성을 보여주지만, 또한 이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외공간과 구획화 기술에 대한 논의에서 Ong은 신자유주의 통치기술과 합리성에 초점을 두어 설명했다. 중국의 사례를 논의할 때는 예외공간의 정치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녀는 구획화 기술은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통제된 정치 및 경제 실험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 메커니즘이라 주장했다.<sup>11)</sup> 나아가 중국

10)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개성공단의 입금, 통행 등의 문제가 남북 지정학적 갈등의 중요한 요인이자 대상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개성공단이 기존의 지정학적 질서로부터 예외적인 지정학적 공간인 동시에 지정학적 논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측면도 공존하는 모순적 공간이었음을 보여준다.

11) 외부에 공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개성공단과 외부세계와의 연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개성공단 할 바에는 똑똑히 해주어야 …… 국방위원회 원래 생각도 그렇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거기

에게 특구는 중국 본토 외부에서의 시민사회에 대한 실험공간이라는 측면과 함께 향후 정치적 통합을 위한 제도적·경제적 우회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Ong, 2006: 111; 116). 구체적으로 홍콩 특별행정구의 경우 자본주의 네트워크의 발달과 시민권의 용인을 통해 향후 정치적 통합으로 이르는 우회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구획화 기술은 분단된 국가의 통합을 위한 대안적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Ibid., 113~114). Ong은 이러한 논리를 한반도에도 적용해서 북한에서의 특구와 같은 예외공간은 오히려 아감벤의 논의와는 정반대로 국토 전반의 죽음의 캠프(death camp)에 대한 정치적 예외공간으로, 생명정치와 정치적 개방을 위한 대안적 정치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이라는 구상이 실질적으로 시험될 수 있는 긍정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Ibid., 117). 그러나 Ong의 중국과 북한에서의 특구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논의에서는 신자유주의 예외공간으로서의 특구에 대한 논의는 부재하고, 오히려 이런 신자유주의 질서로의 편입을 정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로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중국의 구획화 모형은 사회주의 북한이 개방되고 마침내 남한과 통합하는 데 유의미한 실험임을 주장하고 있다(Ong, 2004: 71).

흥미로운 것은 앞에서 논의한 개성공단의 이중적 예외성은 각각 다른 정치세력에 의해 선택적으로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남측의 중도와 진보세력은 기존의 대결, 갈등과 모순으로 점철된 한반도 분단구조로부터의 예외공간으로서의 개성공단의 정치적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Ong의 북한 특구에 대한 주장과 같이 새로운 지경학적 예외공간을 통한 지정학

---

서도 역시 통신이라든가 모든 게 개성지구가 ..... 단말(단절)이 돼야 합니다. 이게 북반부와 연결이 안 돼야..... 단말이 되는 것이 기술적으로 담보되면 개성지구 통행, 통신 개방시키고 활성화시켜 나가겠다.” 이 발언에서 드러나듯 개성공단이 북한 영토로부터 충분히 차단될 때 외부세계와의 연계를 활성화시키겠다고 주장한 것처럼,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지 않고 새로운 경제방식을 실험하는 공간으로 특구를 인식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회의록 인용: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140902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6251409021)).

적 질서의 변화를 전망한다. 반면 보수세력의 경우, 반대로 기존의 북한의 영역성에서 예외공간임에 주목하면서, 이를 통해 개성공단 노동자들의 착취와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이 공간을 통한 제한적인 외부세계와의 경제적 연계를 통해 오히려 북한 정권을 연장시키며 기존의 분단구조를 고착화시키는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 3. 개성공단: 예외공간에서 보편공간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위시하여 우리는 북한에 거대한 경제적 이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철도, 통신, 도로, 전기, 항만, 관광 등 굵직굵직한 경제적 권리를 30년 내지 50년의 기한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북한경제 전체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경제적 진출은 남북이 다 같이 이익을 보는 윈윈의 협력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북측으로 각기 5km, 10km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휴전선이 그만큼 북쪽으로 올라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보에 지대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김대중, 2006).

개성공단사업은 우리에게 ①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험이라는 경제적 측면, ②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의 정치·군사적 측면, ③ 남북주민 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④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 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때문에 개성공단은 한마디로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홍양호, 2015).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의 연장선상에

서 남측의 진보 및 중도세력은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와 함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지정학적 잠재력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의 개발을 통해 북한의 토지, 노동력 등을 활용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혜택을 넘어서, 북한이 시장경제를 학습하고 개혁·개방하도록 유도할 수 있으며 향후 통일경제 모델을 시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예외공간에서 향후 통일 이후 보편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배태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진보 및 중도세력의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은 크게 지정학적 효과와 지정학적 효과로 구분지어 분석할 수 있다.

첫째, 개성공단의 지정학적 효과와 관련하여 대북 전문가인 Aidan Foster-Carter(2016)는 개성공단 운영에 대해 “세계에서 가장 삼엄하게 무장되어 반세기 동안 통행이 불가능했던 최전선을 현관문으로 바꾼 것 (“[To turn] a bit of the world’s most heavily armed frontier, impassable for half a century, from a front line into a front door”)”이라고 평가했다. 국내의 중도 및 진보세력은 개성공단의 운영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진전되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전략상으로도 남한의 안보에도 큰 기여를 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후자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기 통일부장관들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의 지정학적 가치를 강조했다.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이후 남북경협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했던 임동원 전 장관은 개성 지역은 북한의 최전방 군사요충지이기 때문에 북한이 쉽게 내줄 것이라 믿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역으로 남한이라면 공단개발을 위해 개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언했다(2008: 466). 정동영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을 만나 지도를 들이밀고 ‘개성공단 위치가 어디인 줄 아시나? 6·25 때 남침로이자 유엔군이 북상했던 전략적 요충 거점이다. 북한군 6사단, 64사단, 포병여단, 탱크부대, 포진지 등 6만 명의 병력과 중화력이 밀집한 지역인데, 이 지역을 남쪽의 공단으로 내주겠다는 것’임을 주장하였다”(곽재훈, 2016). 또한 개성공단의 개발을 통해 조기경보기능을 24시간 이상 향상시켰으며, 북한의 정사정포 부대를 15km 이상을 후퇴시켰다는 점에서

개성공단이 가져다 준 안보적 가치를 강조했다(천관율, 2013). 정세현 장관은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 같이 개성공단이 개발됨으로써 휴전선이 사실상 북상했다고 주장했다(김은지, 2016).<sup>12)</sup> 개성공단의 지정학적 가치에 대한 담론은 특히 2013년 개성공단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을 때, 그리고 올해 초 전면 중단되었을 때 주로 동원되고 확산되었는데, 예를 들어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데 대해 한반도 안보의 마지노선이 무너졌으며 안보위협이 가중되었다고 주장했다(김동현·서혜림, 2016). 이러한 시각에서 개성공단의 의의는 지정학적 접근을 통해 지정학적 안보를 개선했다는 점에 있다.

둘째, 개성공단의 경제적 가치와 잠재력에 초점을 두는 지정학적 시각이 있다. 우선 개성공단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일종의 지정학적 상상력이 작동하고 있다(임을출, 2005; 정동영, 2013). 중국과 동남아시아 제조업체들처럼 저임금에 기반을 둔 경쟁력과 비교할 때 국내의 중소기업들은 높은 원자재 가격, 고임금, 내수침체 등의 문제를 겪으면서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수도권과 가까운 물리적 입지의 우위성을 비롯해서 낮은 토지임대료와 저렴한 임금 등을 고려할 때 국내의 중소기업 규모 제조업체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제공된 공간이라는 것이다(Lee, 2015). 개성공단을 노동생산성 및 임금, 토지이용, 세제, 물류 등의 조건에서 중국 청도공단, 베트남 탄뚜어공단, 우리나라 시화공단 등과 비교하는 표는 개성공단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적극적으로

12)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개성공단의 안보적 효과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있다. 예를 들어 《신동아》의 “개성공단 개발로 휴전선 사실상 北上”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는 개성공단 개발로 인민군 4개 보병연대와 전차대대가 후방 이전했으며, 장사정포도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황일도, 2004). 북한 또한 개성공단을 개발하면서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남측에 많이 양보했음을 강조했다. 북한의 내각 기관 민족경제협력위원회는 “개성공단은 역사적인 6·15 통일시대의 산물로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극도의 침예한 최전연[최전선] 지역을 통제로 남측에 내주어 건설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협력의 상징”이라고 밝혔다(장철운, 2013).

로 동원되고 있다(이해정, 2012; 홍순직, 2015). 또한 위와 관련해 개성공단이 우리 경제영토의 확장이라는 보는 시각도 개성공단의 지경학적 가치에 대한 담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래 ‘경제영토’는 정부에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상대국들의 국내총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의미로 동원한 개념으로, 즉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개방된 타국 시장을 뜻한다(김정필, 2014). 그러나 개성공단과 연관되어서는 기존의 개념 대신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우리가 차지한 영토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서훈 교수는 “민간기업이 경제적 이해관계만 가지고 개성에 진출해 경제영토가 됐고, 결과적으로 개성이라는 전방을 비무장할 수 있었다”(장슬기, 2016)라고 주장했고, 정동영 전 장관은 “개성공단이란 건 어쨌든 휴전선 넘어, 지뢰밭 건너, 철조망 끊고 북이 남쪽에 2000만 평을 경제영토로 내준 겁니다”라고 주장했다(정동영, 2013). 언론에서는 개성공단의 폐쇄에 대해 “우리 기업들이 대거 입주해 사실상 우리 ‘경제 영토’였던 지역이 개성공단 조성 전의 경계가 삼엄한 군사지역으로 회귀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김수한, 2016). 특히 2000년대 이후 북중 경제관계가 급진전되면서 ‘북한의 중국 식민지화’, ‘북한의 동북 4성화’와 같은 주장이 제기되었는데, 개성공단은 이러한 중국의 대북 경제영향력에 대한 유일한 남측의 대안이라 여겨졌다(Cronin, 2012; Lee, 2015). 즉, 대북투자과 무역뿐만 아니라 경제특구 공동개발 등 중국의 북한에 대한 지경학적 접근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가 이대로 지속되면 북한에서 한국의 경제영토는 개성공단밖에 없다”(고수석, 2015) 등과 같이 위기의식이 드러나기도 했다.

셋째, 개성공단의 현재적인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를 넘어서 미래 한반도 통일을 위한 공간으로 상상되고 욕망되면서, 개성공단에 대해 향후 통일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보는 시각도 팽배했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남과 북 모두에게 경제적 활로를 제공하고 지정학적 갈등의 해소와 한반도 평화의 정착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질 뿐

만 아니라, 향후 통일을 예비하고 실험하는 공간이자 규범적 모델로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개성공단은 통일을 연습하는 현장이라 규정하면서, “개성공단은 북쪽에 돈 퍼주자고 시작한 게 아니지 않나…… 무슨 말이나 하면 남쪽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쪽의 노동력과 토지가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면 우리 경제를 살려내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살려내면서 북쪽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통일경제 모델을 정착시킬 수 있느냐는 실험을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영섭, 2008).

개성공단이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을 반영한다는 주장은 Ananya Roy의 아시아와 미래상의 정치(politics of futurity)에 대한 논의와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Roy(2016)는 소위 ‘아시아의 세기(the Asian Century)’라는 이데올로기에는 발전 지향으로서의 아시아의 미래상(futurity)이 담겨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러한 미래상 그 자체가 어떻게 사회를 통치하는 양식으로 작동하는지에 주목했는데, 이를 ‘미래상의 정치(politics of futurity)’라고 규정했다. 즉, 개발은 아시아의 미래상의 정치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작동하면서, 이런 개발을 통한 번영된 아시아의 미래상에 대한 강조는 특정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작동방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Roy, 2016: 318). 예를 들어 그녀는 ‘아시아의 세기’는 글로벌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표방되는 ‘미국의 세기(American century)’와는 단절을 하고, 대신에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아시아의 발전경로로 부각시키면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해결을 우선시한다고 주장했다.

Roy가 ‘아시아의 세기’라는 시간적인 차원(temporal dimension)에서의 미래상의 정치(politics of futurity)를 논의하고 있다면, 중도와 진보진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담론은 공간적인 실험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미래상을 투영하고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의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적인 미래상(futurity)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구체적으로 개성공단을 통해 북측의 저렴한 노동자와 남측의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경제적으로 합리적이며 국제적으로도 경쟁력 있는 한반도의 발전미래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개



성공단을 통해 통일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회에서의 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꾀할 뿐만 아니라(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획득하고), 개성공단은 남측의 중소기업에게 경제적 활로를 열어주는 것을 넘어서 미래 통일을 예비하는 공간으로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정세현 전 장관은 “언젠가는 개성공단 모델이 북한 전체로 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는데(차대운·홍지인, 2014), 이는 한마디로 개성공단이라는 예외공간이 북한 경제 전반에 걸쳐 보편공간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주장은 앞서 설명한 개성공단의 지경학적 잠재력에 대한 논의와 연결되어, 개성공단은 북의 노동, 자원과 남의 자본, 기술 간 분업이 진행될 뿐 아니라 전반적인 경제구조에서 산업 간 분업이 이루어지며 선순환하는 한반도 경제의 모델이자 한반도 경제공동체 현실화를 위한 실험실의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전문가인 오기형은 개성공단과 한반도의 미래상과 관련해 좀 더 구체적인 주장을 제기했다.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 남과 북의 경제협력과 통일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미래가 한반도의 미래입니다…… 개성에서 성공하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성공했듯 북한의 개혁개방도 성공할 것입니다. 제2, 제3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성공의 길을 찾겠습니다. 그 성공 여부에 우리의 미래 경제가 달려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국가 대한민국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서민지, 2016). 즉, 개성공단을 통한 한반도의 통일경제모델의 보편화 과정은 개성공단의 성공이 북한의 개혁개방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동북아 경제중심이라는 한반도 경제 미래상의 실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성공단 모델의 성공 → 북한의 개혁개방 → 한반도 동북아경제중심으로 도약”이라는 선형적 발전모델이 개성공단에 대한 지경학적 비전과 상상력에 배태되어 있으며, 개성이라는 지역을 넘어 한반도 경제권과 나아가 동북아시아 경제권을 포괄하는 지경학적 미래상을 실현하는 공간적 실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한반도 경제론’ 등의 이름으로 한반도 발전전략을 위한 대안적 접근으로 논의되

었다(서동만, 2006;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2007; 이일영, 2012).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면 진보 및 중도세력에게 개성공단은 현재적 차원에서 지정학적·지경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공간이며, 특히 지정학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 안보와 평화를 증진시키는 지정학적 효과를 낳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개성공단은 향후 통일 한반도경제의 미래상을 위한 규범적 모델이자 구체적인 남북협력을 실현해가는 실험실로서의 의미를 가지면서, 대안적 발전모델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보았다.<sup>13)</sup>

#### 4. 개성공단: 문제공간, 인질 공간 또는 기회 공간?

2013년 8월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인 Bruce Klinger는 “‘개성공단’이라는 덫(The Kaesong Trap)”이라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살리려 하는가’이다. 개성공단은 사면초가에 빠진 북한 정권에 꾸준한 자금원 역할을 해 혜택은 전적으로 북한에 돌아가는데 말이다. 남측으로서는 개성공단을 확대해 아무런 경제적 인센티브도, 기업들의 지지도, 정치적 이익도 얻을 수 없다. 북측의 최근 위협이 있기 전에도 개성공단은 이미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간신히 명맥을 이어가는 수준이었다(Klinger, 2013).

13) 앞서 Ong의 중국 및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논의에서 신자유주의 통치기술에 대한 부분이 부재했듯이, 진보·중도진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에서도 ‘시장과 돈을 이용한 평화’(녹색당, 2016)라는 일부 집단의 비판 이외에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개성공단을 북한 노동자들의 역량 강화와 시장경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달되는 장으로 보는 견해(Lim, 2013)가 지배적인데, 여기서 북한지역에 시장경제에 적합한 신자유주의 주체성의 양성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부재하다(Lee, 2015: 706).

한마디로 2000년 6월 남북 간의 정상회담 결과로 탄생한 개성공단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모두 실패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는 남측 대다수 보수세력이 가지고 있는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일부 좌파진영을 제외한 진보·중도 진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시각은 대체로 일관적인데 반해, 보수 진영 내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이 대체로 분화되거나 비일관적인 형태로 발전했다. 개성공단이 북한정권의 체제유지 비용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비용으로 쓰인다는 일종의 현금박스라는 주장은 개성공단을 시작할 때부터 보수세력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 비전은 지난 2월 개성공단 폐쇄의 주요 논리로 부각되면서 보수진영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공식적인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다(Choe, 2016). 즉, 개성공단은 북한의 독재정권을 유지시키고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비용을 대는 지정학적으로 문제공간이라는 인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공간이라는 시각과 연결되어 개성공단이 일종의 인질로 작동하면서 지정학적으로 안보위협이 된다는 견해 역시 제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들과는 달리 개성공단은 오히려 북한체제 전복을 위한 기회의 공간이라는 주장도 등장했다. 여기서는 이상 소개한 보수세력에 대한 개성공단의 세 가지 상이한, 그러나 연결되는 비전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사실 이전까지 개성공단에 대한 보수진영의 비판적 시선은 대체로 간헐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견해를 표방하거나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에서는 5·24 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유지와 운영을 기조로 해서 기업 수와 북한 측 노동자의 수 모두 정부 출범 전보다 2배가량 증가했다(김천식, 2015: 79).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 선언을 계기로 개성공단을 문제공간으로 보는 시각이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계, 언론계, 학계 등 곳곳에서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시각들이 전면화되는 형국을 보이는 것이다.

올해 초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는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결

정적 계기가 되었는데, 이는 글의 첫머리에서 인용한 ‘개성공단 전면 중단 관련 정부 성명’에서 개성공단 임금의 핵개발 전용론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주장의 신빙성 여부 등을 둘러싸고 통일부 장관의 발언 반복 등과 같은 논란이 있었으나, 2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에 관한 국회 연설’에서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sup>14)</sup>

이러한 주장은 총선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원되어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에 대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안보 포기한 야당을 찍으면 개성공단 재가동해서 북한으로 달러가 1년에 1억 불 이상 들어가 김정은이 핵폭탄 더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손정빈·채운태, 2016). 또한 개성공단이 북한의 무기개발비용으로 사용되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북한 체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문체공간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하는 근거로 “개성공단이 김정은 정권의 현금 자동지급기가 되었다”라고 주장했고(정옥식, 2016), 《월간조선》 역

14)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다.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srh%5Bpage%5D=3&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4201](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srh%5Bpage%5D=3&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4201).

시 개성공단은 북한의 ‘현금인출기’에 다름 아니라고 규정했는데(정혜연, 2016), 이러한 시각은 개성공단이 출범하면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김성욱(2014)은 “개성공단은 그저 북한정권의 돈줄일 뿐이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개성공단은 북한의 체제를 변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의 정권을 연장시키고 통일을 가로막는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박근혜 정부에게 2013년 4월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를 기회로 삼아 개성공단을 영구적으로 폐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개성공단을 탄생시킨 햇볕정책은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북한 정권의 생존을 뒷받침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하였다(《The Wall Street Journal》, 2013). 다른 한편으로 개성공단의 중단이 오히려 북한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있는데, 김성한은 공단의 폐쇄를 계기로 개성의 주민들이 북한 체제에 대한 새로운 불만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황대진·엄대운, 2016).

이와 같이 개성공단이 문제공간이라는 담론에는 개성공단이 북한 노동자의 임금착취 그리고 인권탄압의 현장이라는 시각도 함께 작동하고 있다. 즉, 개성공단이 단지 북한 정권 유지와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을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미국의 대북 인권대사였던 Jay Lefkowitz에 의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는 북한에서의 인권 탄압의 현실을 비판하면서, 세계가 개성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현실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노동자들은 일당으로 2달러도 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조차도 받는다는 보장이 없을 정도로 노동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Lefkowitz, 2006).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에서도 Lefkowitz의 주장을 근거로 좀 더 구체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서 개성공단이 북한의 개방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노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Human Rights Watch, 2006).<sup>15)</sup>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통일부에서 반박하는 등 개성공단의 임금 착취 문제는 국내외에서 잠시 논란이 되었다가, 2014년

미국의 대북 전문가 Marcus Noland가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한 연구보고서 “Labor Standards and South Korean employment practices in North Korea”를 발표하면서 다시 부각되었다(Noland, 2014). 이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 장마당 환율을 고려할 때 한 달 임금이 2달러도 채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었다. Noland는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노동자들이 남한 사람들과의 빈번한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성공단에서의 노동시장 관련한 관행들이 북한의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노동인권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 주장은 다시 국내의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개성공단의 임금 착취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더욱 커졌다. 즉, 임금 착취 문제 등 노동인권 측면에서 개성공단을 문제공간으로 바라보는 담론은 주로 국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보수진영에서는 개성공단이 ‘문제공간’이라는 견해와 함께 ‘인질공간’이라는 시각도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던 2013년에 보수진영의 대표적 논객 조갑제를 중심으로 ‘개성공단 인질론’ 또는 ‘개성공단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개성공단의 운영이 안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조갑제, 2013).

북한정권은 언젠가는 천안함 폭침 같은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그때는 우리 軍이 약속대로 몇 배의 보복을 해야 한다. 그 순간 우리 국민 수백 명이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데 안심하고 敵(적)을 때릴 수 있나? 때리면 北이 한국인들을 인질로 잡을 것이 뻔한데? 우리가 양보를 해서라도 개성공

15) Human Rights Watch의 Phil Robertson(2015)은 노동조건과 관련한 개성공단 관련 법규들이 국제기준에 크게 미흡하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독립적인 노동 조합을 결성하고 대표자를 선출해서 집단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자에 대한 성적 차별과 착취 그리고 아동 노동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단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돈벌이를 위하여, 또는 북한 정권을 도와주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개성공단이란 존재 자체가 한국군의 작전을 제약한다. 북한군은 개성공단에 한국인들이 들어와 있는 순간부터 한국군을 압박할 수 있는 인질 효과를 본다(조갑제, 2013).

이와 같은 주장은 남북 간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을 강조하면서 개성공단의 남측 노동자들이 언제든지 인질 또는 볼모가 되어 우리의 안보전략에 중대한 약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근본적인 불신에 기반을 둔 이와 같은 주장은(조남준, 2004)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2월 국회연설에서도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 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 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다”<sup>16)</sup>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 볼모론’을 공식화했다(박세열, 2016).<sup>17)</sup>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을 북한 체제전복을 위한 기회공간이라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 노동자들에게 간식으로 지급된 초코파이가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북한 사람들에게 북한 체제에 대한 회의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동할

16)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인용했다. [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srh%5Bpage%5D=3&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4201](http://www1.president.go.kr/news/speech.php?srh%5Bpage%5D=3&srh%5Bview_mode%5D=detail&srh%5Bseq%5D=14201).

17) 북한은 이와 같은 남측 보수진영의 주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은 돈줄이니, 억류니, 인질이니 하면서 우리의 존엄을 모독하는 참을 수 없는 악담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는 (개성공단을 통해) 경제적으로 얻는 것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은 남측이다”(이준희, 2013에서 재인용). 여기서 주목할 지점은 개성공단을 통해 더욱 큰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것은 남측이라고 주장한다는 점인데, 이는 북측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한반도 통일과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는 것까지도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윤석제, 2009).

것이라는 주장이다. 장기표는 ‘한반도통일전략에언서 통일초코파이’라는 책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통한 흡수통일만을 유일한 통일 방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성공단을 통한 초코파이의 유입과 북한 사회로의 확산을 하나의 상징적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다(장기표, 2015). 조선일보 논설위원 지해범(2013) 역시 개성공단의 초코파이는 “북한 주민이 바깥세상에 눈뜨게 하는 ‘자유의 창’으로 “35g짜리 초코파이가 북한 체제에 목격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라고 주장했고, 영국 《가디언》 지에서도 초코파이가 북한체제의 정통성에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Branigan, 2013).<sup>18)</sup> 그러나 이와 같이 초코파이를 통한 북한체제의 변화가능성에 주목한 ‘초코파이 효과론’은 보수진영 내부에서도 논쟁의 대상이다. 예를 들어 김성욱(2014)은 폐쇄와 억압은 북한 정치체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초코파이 또는 개성공단을 통한 변화가능성을 부정한다.

이상에서 논의한 보수진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은 상이한 논리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의 담론이 별개로 작동하기보다는 서로 결합되기도 하면서 개성공단에 대한 부정적인 비전이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또한 이들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공통적인 지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각 담론은 북한 붕괴 또는 체제 전환을 목표와 지향으로 삼고 있다. 진보·중도 진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비전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같은 점진적 변화를 추구하는 데 반해, 문제공간, 인질공간, 기회공간은 북한의 체제에 대한 규범적인 판단을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식은 다르지만 북한 정권 교체 또는 붕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두 번째 공통점은 개성공단을 지정학적 시각에서만 접근하고 지정학적 상상력은 부재하다는 점이다. 개성공단의 시장경제 학습효과와 같은 북

18) 이와 관련하여 채진주는 지난 2014년 뉴욕에서 ‘북한의 초코파이화(The Choco Pie-ization of North Korea)’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 전시 작품은 작가의 개인 홈페이지([http://jinjoochae.com/section/365995\\_The\\_Choco\\_Pie\\_ization.html](http://jinjoochae.com/section/365995_The_Choco_Pie_ization.html))에서 볼 수 있다.



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을 통한 남측의 경제적 이해 등에서도 크게 관심을 두지 않거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이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지경학적인 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렵다. 통일의 경제적 효과라든지 한반도 철도 연결 등을 통해 유라시아 네트워크 구축 등의 계획과 주장들은 북한에 대한 지경학적 이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4년 ‘드레스덴 한반도평화통일구상’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국은 북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 통신 등 가능한 부분의 인프라 건설에 투자하고, 북한은 한국에게 지하자원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남북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자원·노동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며, 장차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신지홍·김남권, 2014). 그럼에도 이러한 구상에서 개성공단은 찾아보기 힘들고, 구체적으로 통일대박론 선언 이후 출범한 통일준비위원회에서의 논의들을 살펴봐도 개성공단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한반도 경제공동체에 대한 비전에서 개성공단이 부재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진보·중도 세력이 개성공단을 한반도 경제를 실험하고 지향하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반대로, 현 정부에서는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을 통한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을 상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상 흡수통일을 전제로 통일준비 논의를 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 결정이 단순히 대통령 개인의 감정적인 결정 또는 화풀이(《경향신문》, 2016)만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정치세력 간의 비전과 이해가 충돌하는 것처럼 개성공단의 폐쇄가 낳는 효과에 대해서도 이런 견해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진보와 중도 진영에서는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남북 간의 유일한 대화의 통로와 관계개선을 위한 교두보가 사실상 사라졌고 이로 인해 지정학적 위협이 더욱 가중되었을 뿐만 아니라, 통일은 더욱 요원해졌고 한반도가 다시 냉전시대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보수 진영에서는 개성공단 폐쇄를 통해 북한정권 유지와 무기개발을 위한 현금 루트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반박했다(Frank and Clement, 2016). 그러나 개성공단의 폐쇄는 양 진영의 개성공단에 대한 담론의 문제들도 그대로 드러냈다. 진보·중도 진영의 경우 지정학적인 접근을 통해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단선적 논리의 한계를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보수 진영의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한반도 안보환경이 더욱 불안정해졌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측은 남측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응해 개성공단 폐쇄와 함께 군사통제구역을 선포했고, 남측 역시 지난 3월 개성공단 일대를 우리 군의 군사지역으로 전환했다. 즉, 이는 한반도 지정학적 구조에서 유일한 예외공간이었던 개성공단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결국 개성공단의 폐쇄는 Armstrong(2013: 210)이 이미 예견했듯이, 지난 10여 년간의 남북경협과 남북관계의 발전이 한반도 분단 역사에서 역사적 일탈(historical aberration)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원고접수일: 2016년 5월 15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7일

게재확정일: 2016년 6월 16일

최종원고접수일: 2016년 6월 20일

❖ Abstract

Geopolitics of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Space of Exception,  
Universal Spaces or Hostage Space?

Seung-Ook Lee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flicts of various visions, interests, and desires arou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It argues that the KIC serves as not only a space of exception from both sovereign territoriality and the geopolitical stru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 site where the visions for North Korea and the Korean unification compete. Drawing upon the notions of critical geopolitics such as geopolitical vision and geoeconomic imagin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political tensions of various interests, visions, and imaginations around the KIC. These conflicts are influential in the construction of popular discourse on North Korea,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unification, and meaningful in the formation of North Korea policy.

Keyword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Geopolitical Vision, Geoeconomic Imagination, Space of Exception, Hostage Space

## 참고문헌

- 개성공단5년 발간위원회. 2008. 개성공단 5년. 통일부 개성공단사업지원단.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2015) “개성공단 안내: 연혁.” <https://www.kidmac.com/kor/contents.do?menuNo=100143>.
- 고수석. 2015. “김샤오핑.” 《중앙일보》 12월 21일, <http://news.joins.com/article/19279189>.
- 곽재훈. 2016. “정동영 ‘박근혜, 개성공단 실상 못보고 오해.’” 《프레시안》 2월 12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214>.
- 김대중. 2006. “북한 핵과 햇볕정책.” 서울대학교 통일연구소 초청 강연문, 10월 19일, [http://kdjpeace.com/home/bbs/board.php?bo\\_table=d02\\_06&wr\\_id=110](http://kdjpeace.com/home/bbs/board.php?bo_table=d02_06&wr_id=110).
- 김동현·서혜림. 2016. “野 ‘안보 마지노선 무너졌다’ … 개성공단 중단 강력 비판.” 《연합뉴스》 2월 11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1/020000000AKR201602110800000001.HTML>.
- 김성욱. 2014. “개성공단은 그저 북한정권의 돈줄일 뿐이다.” 《리버티헤럴드》 3월 12일, [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5Bfc%5D=1&bbs\\_id=libertyherald\\_new\\_s&doc\\_num=9331](http://libertyherald.co.kr/article/view.php?&ss%5Bfc%5D=1&bbs_id=libertyherald_new_s&doc_num=9331).
- 김수한. 2016. “군, 개성공단 일대 군사지역으로 전환.” 《헤럴드경제》 3월 16일,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60316000254>.
- 김은지. 2016. “정세현, ‘홍용표 장관, 실무를 모르니 용감하게 하는 소리.’” 《시사인》 440호, 2월 223일,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15>.
- 김정필. 2014. “FTA로 넓어졌다는 ‘경제 영토’가 뭐지?” 《한겨레신문》 11월 11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3995.html](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3995.html).
- 김천식. 2015. 『개성공단 협상 과정과 쟁점』, 『공간평화의 기회와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 개성공단』, 진인진, 63~103쪽.
- 녹색당. 2016. “개성공단 폐쇄는 박근혜 정권의 ‘셀프 경제 제재’다.” 녹색당 논평, <http://www.kgreens.org/commentary/7542/>.
- 박명규. 2015. 『개성공단 실험과 한반도형 통일모델』, 『공간평화의 기회와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 개성공단』, 진인진, 365~379쪽.
- 박세열. 2016. “北 핵개발비 95%를 ‘이명박근혜’ 정권이 댔다?” 《프레시안》 2월 16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291>.
- 서동만. 2006. 『6·15시대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발전전략』, 《창작과 비평》 131, 217~230쪽.
- 서민지. 2016. “‘더민주 입당’ 오기형 변호사, 미래경제만 보겠다.” 《The Fact》 1월

- 10일, <http://news.tf.co.kr/read/proday/1618828.htm>.
- 손정빈·채윤태. 2016. “김무성 ‘野 개성공단 정상화 하자고? 정신나간 사람들.’” 《뉴시스》 4월 2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02\\_0013997102&cID=10301&pID=10300](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402_0013997102&cID=10301&pID=10300).
- 신지홍·김남권. 2014. “차대통령 드레스덴 한반도평화통일구상 연설 전문.” 《연합뉴스》 3월 28일,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28/0511000000AKR201403281749000\\_01.HTML](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3/28/0511000000AKR201403281749000_01.HTML).
- 윤석제. 2009. “개성공단 폐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노컷뉴스》 5월 19일, <http://www.nocutnews.co.kr/news/587380>.
- 이승욱. 2016.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특구전략: 영역화, 분권화, 그리고 중국식 개혁개방?」.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9(1), 122~142쪽.
- 이영섭. 2008. “정세현 ‘개성공단은 통일 연습하는데다.’” 《뷰스앤뉴스》 11월 27일,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43314>
- 이일영. 2012. 「‘한반도경제’의 과제와 전략: 네트워크 경제모델의 제안」. 《동향과 전망》 84호, 160~192쪽.
- 이준희. 2013. “개성공단 최대 위기 … 북 ‘근로자 철수·폐쇄 검토.’” 《MBN뉴스》, 4월 8일, [https://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28220](https://mbn.mk.co.kr/pages/news/newsView.php?news_seq_no=1328220).
- 이해정. 2012. 「U-turn to 개성공단: 개성공단의 이점과 활용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494호.
- 이효원. 2015. 『법제도적 공간으로서의 개성공단』.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프로젝트 개성공단』. 진인진, 107~149쪽.
- 임동원. 2008. 『피스메이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25년』. 중앙 북스.
- 임을출. 2005. 『웰컴투 개성공단: 역사, 쟁점 및 과제』. 해남.
- 장기표. 2015. 『한반도통일전략예언서: 통일 초코파이』. 꿈과 의지.
- 장슬기. 2016. “‘북한 돈줄 끊는다? 중국 도움 없인 어려워.’” 《미디어오늘》 2월 16일,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28054>.
- 장철운. 2013. “北 ‘개성공단 건드리면 다시 군사지역으로 만들 것’” 《연합뉴스》 2월 6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06/0200000000AKR201302062300000\\_14.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2/06/0200000000AKR201302062300000_14.HTML).
- 정동영. 2013. “박근혜 정부에 권하는 개성공단 지침서.” 《국민뉴스》 5월 10일, [http://kookminnews.bstorm.co.kr/news\\_view.jsp?cg\\_id=&c\\_id=&ncd=4980](http://kookminnews.bstorm.co.kr/news_view.jsp?cg_id=&c_id=&ncd=4980).
- 정육식. 2016. “‘북풍 총동원령’은 총선용? 장기집권 플랜!” 《프레시안》 2월 12일,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3210>.
- 정혜연. 2016. “개성공단 추진에서 전면 중단까지: ‘北 김정일 南 햇볕정책이 만들어 낸 어설플 합작품.’” 《월간조선》 3월호,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h&nNewsNumb=201603100015>.

- 조갑제. 2013. “또 호들갑 떠는 기자와 자칭 전문가들.” 조갑제닷컴, 8월 8일,  
[http://chogabje.com/board/view.asp?C\\_IDX=52330&C\\_CC=AZ](http://chogabje.com/board/view.asp?C_IDX=52330&C_CC=AZ)
- 조남준. 2004. “개성공단, 성공할 수 있을까?” 월간조선 홈페이지, 7월12일,  
<http://monthly.chosun.com/client/reporter/writerboardread.asp?idx=657&cPage=1&wid=njcho>.
- 조명훈. 2006. “개성공단의 착취 현실에 눈감아선 안 된다.” 노동자연대 12월 16일,  
<http://wspaper.org/article/3690>.
- 지상현·폴린 플린트. 2009. 「지정학의 재발견과 비판적 재구성」, 《공간과 사회》 31, 160~199쪽.
- 지해범. 2013. “개성공단 초코파이.” 《조선일보》 5월 3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3/2013050302512.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03/2013050302512.html).
- 차대운·홍지인. 2014. “<개성공단10년> ① 경제통합 실험장…국제화로 도약 추진.” 《연합뉴스》 6월 22일,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4/06/19/0505000000AKR20140619184000043.HTML>.
- 채명민. 2011.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관리위원회)」, 《수은북한경제》 봄호, 80~86쪽.
- 천관율. 2013. 「개성공단의 가치는 전쟁 조기경보기능」, 《시사인》 4월 23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08&aid=0000009765>.
- 한반도사회경제연구회. 2007. 『한반도 경제론: 새로운 발전모델을 찾아서』. 창비.
- 홍석현. 2014. “통일 한국의 출발점은 개성공단의 성공이다.” 《허핑턴포스트 코리아》 9월 22일, [http://www.huffingtonpost.kr/seokhyun-hong-kr/story\\_b\\_5848106.html](http://www.huffingtonpost.kr/seokhyun-hong-kr/story_b_5848106.html).
- 홍순직. 2015. 「경영자의 시각에서 본 개성공단」, 『공간평화의 기획과 한반도형 통일 프로젝트 개성공단』, 진인진, 209~230쪽.
- 홍양호. 2015. 「개성공단의 실상과 정책적 함의」, 《JPI 정책포럼》, 2015-17.
- 황대진·엄보운. 2016. “年 1억 달러씩 꼬박꼬박 챙기던 北통치자금 차단.” 《조선일보》 2월 11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1/2016021100295.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11/2016021100295.html).
- 황일도. 2004. 「개성공단 개발로 휴전선 사실상 北上」, 《신동아》 1월호,  
<http://shindonga.donga.com/3/all/13/103052/1>.
- Armstrong, C. K. 2013. “De-bordering, re-bordering, un-bordering.” in V. Gelezeau, K. D.
- Ceuster and A. Delissen (eds.). *De-bordering Korea: Tangible and Intangible Legacies of the Sunshine Policy*.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pp. 206~210.
- Branigan, T. 2013. “Choco Pies offer North Koreans a taste of the other side.” The

- Guardian 1 May,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may/01/choco-pies-north-koreans>.
- Choe, S-H. 2016. "South Korea to shut joint factory park, Kaesong, over nuclear test and rocket." *The New York Times* 10 February, [http://www.nytimes.com/2016/02/11/world/asia/north-south-korea-kaesong.html?hp&action=click&pgtype=Homepage&clickSource=story-heading&module=second-column-region&region=top-news&WT.nav=top-news&\\_r=0](http://www.nytimes.com/2016/02/11/world/asia/north-south-korea-kaesong.html?hp&action=click&pgtype=Homepage&clickSource=story-heading&module=second-column-region&region=top-news&WT.nav=top-news&_r=0)
- Cronin, P. M. 2012. *Vital Venture: Economic Engagement of North Korea and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Washington DC.
- Doucette, J. and Lee, S-O. 2015. "Experimental territoriality: Assembl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Political Geography* 47, pp. 53~63.
- Easterling, K. 2014. *Extrastatecraft: The Power of Infrastructure Space*. Verso: London and New York.
- Foster-Carter, A. 2016. "Why North Korea will benefit from Seoul's great leap backwards." *The Guardian* 12 February,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6/feb/12/why-north-korea-benefit-from-seoul-closing-kaesong-industrial-complex-south-korea>.
- Frank, R. and Clément, T. 2016. "Closing the Kaesong Industrial Zone: An Assessment." *The Asia-Pacific Journal* 14(6)5, 15 March, <http://apjif.org/2016/06/Frank.html>.
- Human Rights Watch. 2006. Briefing paper: North Korea: Workers' rights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http://www.hrw.org/legacy/background/asia/korea1006/korea1006web.pdf>.
- Klinger, B. 2013. "'개성공단이라는 덫'" 《월스트리트저널》 한국어판 8월 19일, <http://kr.wsj.com/posts/2013/08/19/%EA%B0%9C%EC%84%B1%EA%B3%B5%EB%8B%A8%EC%9D%B4%EB%9D%BC%EB%8A%94-%EB%8D%AB/> (English version: Klinger, B. 2013. "The Kaesong Trap." *The Wall Street Journal* 18 August, <http://www.heritage.org/research/commentary/2013/8/the-kaesong-trap>).
- Lee, S-O. 2015. "A geo-economic object or an object of geo-political absorption? Competing visions of North Korea in South Korean politics."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5(4), pp. 693~714.
- Lefkowitz, J. 2006. "Freedom for all Koreans." *The Wall Street Journal* 28 April, <http://2001-2009.state.gov/p/eap/rls/rm/66928.htm>.
- Lim, E. C. 2013. "Capacity building at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mplications for North Korea's economic zones."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22(2), pp. 91~113.
- Noland, M. 2014. *Labor Standards and South Korean Employment Practices in North Korea*.

- Washington, D.C.: US-Korea Institute at SAIS.
- Ong, A. 2004. "The Chinese axis: Zoning technologies and variegated sovereignty."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1), pp. 69~96.
- \_\_\_\_\_. 2006. *Neoliberalism as Exception: Mutations in Citizenship and Sovereignty*. Durham and London: Duke University Press.
- \_\_\_\_\_. 2012. "Powers of sovereignty: State, people, wealth, life." *Focaal-Journal of Global and Historical Anthropology* 64, pp. 24~35.
- Robertson, P. 2015. "Abuses in Kaesong Industrial Complex." *Humans Rights Watch Dispatches* 22 April, <https://www.hrw.org/news/2015/04/22/dispatches-abuses-kaesong-industrial-complex>.
- Roy, A. 2016. "When is Asia?"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8(2), pp. 313~321.
- Silberstein, B. K. 2016. "How bad is the Kaesong shutdown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North Korean Economy Watch* 10 February.
- 《경향신문》. 2016. "개성공단은 화풀이 대상이 아니다," 2월 10일,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02103455&code=9\\_90101](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2102103455&code=9_90101).
- 《The Rediff》. 2007. "'SEZs are Special Exploitation Zones.'" 14 February,  
<http://www.rediff.com/money/2007/feb/14inter.htm>.
- 《The Wall Street Journal》. 2013. "Good riddance to Kaesong." 9 April,  
<http://www.wsj.com/articles/SB10001424127887323550604578412103529231678>